

# 영끌투자·돌려막기 등 곳곳 핑크 규모에 따른 부채 양극화도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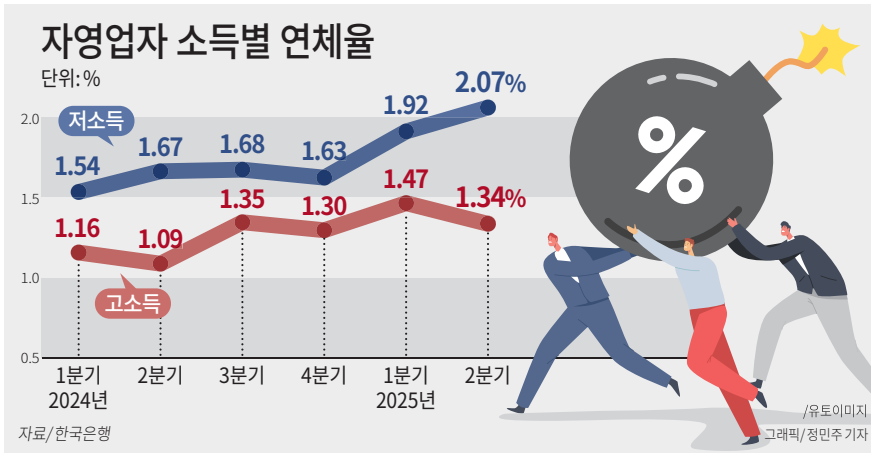
## 개인회생·파산 증가

매출은 줄고 이자부담은 늘어나  
향후 사회적 문제로 비화 가능성  
“일자리 등 구조적 지원 고민해야”

#.“가게만 굴러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죠.”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지난 2021년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와 사업자대출을 최대한으로 당겼다. 하지만 늘어나는 배달수수료와 재료비, 줄어드는 손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김씨는 현재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를 버틴다. 김씨는 “대출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기분이다”라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파산과 회생신청이 늘고 있는 배경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가게빛은 늘어나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소비둔화와 투자 감소 등 내수경기 침체도 원인이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게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상승과 교육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면서 여윔돈이 바닥난 가구가 많아졌다. 주식과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내 투자했던 20~30대 투자자들의 투자실패도 개인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액은 2분기 기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 원 늘었다.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78%로 1년 전 같은 기간(1.50%)과 비교해 0.28%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의 대출은 사업자대출 723조3000억원(68%), 가계대출 346조3000억원(32%)으로 구성



돼 있다. 가게와 기업이 둘다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모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부채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도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분기 기준 14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분기 73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7000억 원 줄었다. 연체율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1.92%→2.07%로 상승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1.47%→1.34%로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상당수가 신용도가 낮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48조8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2조5000억 원 늘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9월 기준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3만 832건으로 1년 전(3만299건)과 비교해 533건 늘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채무자는 장기간 신용회복이 어려워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 저하로 생계 유지와 재취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족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으로 늘어난 대출이 경기회복 부진으로 부담이 더욱 커지며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채무자가 증가하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복지·고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채무자가 재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재교육 등 구조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증시·금·코인 등 자본시장 조정압력 뚜렷

금리인하 기대·AI고평가 논란 등 영향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흐름이 뒤집혔다.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까지 겹치면서 증시·금·코인 등 자본시장 전반에 조정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이번 조정이반도체 중심의 강세 추세를 바꾸기에는 힘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1% 하락한 3929.51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달 초 4221.87까지 치솟으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6.92% 급락했다. 증시 혼풍과 함께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달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거래일 동안 4.08%, 7.26%씩 떨어졌다.

미국 증시에서 AI 고평가 논란이 재점화된 것과 동시에 연준의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3.22%)와 홍콩 항셱 지수(-1.72%)가 함께 떨어졌으며, 간밤 독일 DAX 지수(-1.74%), 프랑스 CAC40 지수(-1.86%)와 영국 FTSE100 지수(-1.27%)를 포함해 뉴욕

3대 지수도 연일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증시뿐만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은 증시·가상자산·금 시세가 함께 오르면서 ‘에브리싱 랠리’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전날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7개월 만에 9만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시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만116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 대비 27.8% 떨어졌다.

고공행진하던 금값도 예외는 아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0.19% 떨어진 온스당 4066.50달러에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20일 4350선까지 터치했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을 비롯한 일부 기관투자자의 엔비디아 전망 매각 결정을 계기로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한 데 더해 미국 경기 및 노동시장의 부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나온 것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휘발유 평균 판매가 1800원 돌파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1)당 1803.41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IS

## 정부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 발표

# 지역제한경쟁 입찰 한도 ‘150억 미만’ 상향

지역업체 수주 2.6조 가량 증가 전망  
담합 여부·소재지 확인 등 관리 강화

향후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 공사에서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88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한도로 늘릴 경우, 지역업체 수주 금액

이 2조6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격,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원 이상) 낙찰자 평가 시에는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만점 기준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낙찰자 평가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낙찰 평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의 배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이같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를 강화할 경우 지역업체의 수

주는 7000억 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도권권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8.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설경기 차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 비수도권 건설업계의 활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공사 수주 기회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한다.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도 시행해 폐이퍼컴퍼니도 속아 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업체 간 담합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역 건설업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달청과 공정위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3분기 대외채권 사상최대… 1.2조弗 육박

국내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크게 증가

지난 3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이 역대 처음으로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대외채권은 2분기(1조 928억 달러) 대비 271억 달러(2.42%) 늘어난 1조119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 및 외화예치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대외채권은 올해 들어 1분기 1조513억 달러, 2분기 1조928억 달러 등 증가세를 보인다 3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채무는 소폭 증가했다. 3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 달러로 2분기말

(7356억 달러) 대비 25억 달러(0.34%) 늘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16억 달러로 54억 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초과)는 5765억 달러로 79억 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외국인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90억 달러)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했다. 반면 정부(-32억 달러), 중앙은행(-12억 달러), 은행(-21억 달러) 부문은 감소했다.

외채 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22.7%에서 3분기 21.9%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